

탁아소 신고제

“현실무시한 행정편의주의”

정부의 비영리 민간 탁아소에 대한 시설 신고 요구로 그렇지 않아도 크게 부족한 탁아소가 문을 닫거나, 운영난에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곽운섭 기자>

탁아소 관계자들 마감일 앞두고 큰반발

정부가 민간 탁아소 시설 신고제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신고 마감일을 앞두고 영세한 민간 탁아소들이 크게 반발, 집단적으로 신고를 기피하고 있다.

보사부는 최근 전국 영리·비영리 민간 탁아소에 9월18일까지 해당 시·군·구청에 탁아소 시설에 대해 신고를 마치도록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보사부는 이 공문을 통해 ‘해당 기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민간 탁아소 관계자들은 “정부의 신고제 강행은 빈민지역 어린이들이 길에 방치되는 현실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규제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민간 탁아소들은 지난해 9월19일 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규정한 시설기준에 미달, 신고 마감일인 9월18일 이후 문을 닫거나 탁아중인 어린이 일부를 내보내야 할 형편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어린이 1명당 최소 필요면적을 0.8평으로 규정하고 있고, 10평당 유아용 화장실 1개, 비상용 계단 등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지난 7월중순 구청으로부터 공

문을 받은 인천시 서구 가좌동 ‘새싹들의 방’ 대표 임정숙(33)씨는 “현행법을 내세운 신고 강요에 앞서 영세한 탁아소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신고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방2개, 부엌1개를 갖춘 10평 규모에서 3~5살 어린이 10명을 돌보고 있는 서울 관악구 신길동 ‘새싹놀이방’ 대표 신미자씨도 “공장에 다니는 기혼 직장여성들을 위해 운영중인데 시설미비로 문을 닫게 되면 그들의 자녀를 누가 돌봐주겠느냐”고 되물었다.

서울 빈민지역 16개소, 충남



대부분 이웃사랑차원에서 영세하게 운영 대책마련없이 시설기준만 강요는 곤란

달동네 1개소, 부천시 1개소 등 18개 탁아소를 운영하고 있는 가톨릭 지역아동연합회의 문경수 회장은 “지난 10여년동안 정부가 방치해온 빈민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탁아소를 운영해 왔는데 아무런 지원방안,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신고를 의무화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공단지역, 빈민지역

에 탁아소 9개를 두고 있는 감리교 사회선교여성회 강명순 회장은 “교회가 이웃사랑 차원에서 운영하는 탁아소까지 신고절차를 밟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발상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사부 가정복지국 아동복지과 황해석씨는 “지난해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제정된 이후 1년동안 경과조치기간을 주었으

므로 9월18일 신고제 이행은 불가피하다. 이 기간안에 신고해 필증을 받지 않은 곳은 운영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의 비영리 민간 탁아소 연합체인 지역탁아소연합회 김경태 회장은 “신고의무제를 강행할 경우 민간 탁아소에서 돌보고 있는 어린이들의 절반은 내보내거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고 우려를 나타내고, 신고제 거부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길에 방치되는 어린이 수를 늘어나게 할 뿐인 신고제의 철회 △후원회비로 어렵게 운영중인 민간탁아소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 마련 △제대로 된 탁아법의 조속한 제정 등을 촉구했다.

한편 올해초 결성된 한국여성단체연합 탁아문제특별대책위원회, 미래의 탁아제도를 위한 걱정모임 등도 최근 잇따라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신고제 철회 촉구 △탁아법 조속제정 △민간 탁아소 활성화 및 육성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신연숙 기자>